

하이에키안 관점에서 본

신경과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인식

민경국(강원대 교수/경제학)

* 아직 완성된 논문은 아닙니다.

1. 문제의 제기

지성계에 크고 작은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만 분다고 해도 샌들(M. Sandel)의 공동체주의, 존 그레이(J. Gray)의 자율론, 윌슨(O. E. Wilson)의 사회생물학, 코스미데스(L. Cosmides), 투비(J. Tooby)의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들의 등장은 인간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은 그 같은 패러다임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등, 자유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고 그래서 자유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패러다임이 또 있다. 이것이 1986년 리베트(B. Libet)의 실험 이래 발전되어온 현대의 신경과학이다.¹⁾ 이것이 자연과학분야에서 오늘날 첨단과학으로 등장하여 그 과학적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 패러다임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그것의 중심된 인식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Prinz, 2004: 20-26)²⁾:

- 인간행동은 물리화학적 인과원리에 따르는 신경연결망에 묶여있다(결정주의).
- 그리고 이 인과적 고리 바깥 어느 곳에도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
-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도 말할 수 없고 책임을 말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에서 신경과학은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고 복지국가와 같은 경제적

1)리베트(B. Libet), 프린츠(W. Prinz), 싱거(W. Singer) 그린(J. Greene), 코헨(D. J. Cohen)등이다.
2) "우리의 행동은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Prinz, 2004: 20-26)

온정주의와 사법(司法)적 온정주의(paternalism)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³⁾

유감스럽게도 그런 인식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사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유명한 1960년 저서 『자유와 헌법』에서 말하듯이, 자유와 책임은 자유사회의 헌법적 원칙이다. 그가 경고하듯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책임을 믿지 않으면 자유사회는 기능하지도 못하고 유지되지도 못한다.”(Hayek, 1960/1995: 128). 자유롭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인간을 중시하고 이 같은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자유사회의 중요한 교육목표로 여기는 것도 자유와 책임의 그 같은 중요성 때문이다.

현대 신경과학의 인식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생겨났다. 진화경제학자인 셔머와 같이 일각에서는 의지의 자유는 ‘허구’라는 것을 시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여 자유와 책임을 견지하려고 한다(Shermer, 2008/2009: 417). 흥미로운 것은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 위원회위원, 가짜니가의 인식이다. 그는 자신의 2005년 저서 『윤리적 두뇌』 제 III 부에서 신경과학의 인간행동 설명은 두 사람 이상이 사는 사회적 세계에서만이 의미 있는 책임규칙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로 기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Gazzaniga, 2005: 100).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호르위츠는 인간행동에는 물리화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자(free chooser)”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의지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을 암시한다(Horwitz, 2010: 385-386).

신경과학의 인식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일면적인 진실이 있지만, 그러나 매우 불완전하다. 이들보다 우리의 각별한 주목을 끄는 자유주의 정치경제철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자유와 책임의 보완성을 강조하고 이를 자유의 헌법의 핵심가치로 여겼던 하이에크(F. A. Hayek, 1899-1992)이다.

그는 1952년에 발간된 (원래 1921년 21세에 썼다.) 저서 『감각적 질서』⁴⁾에서 인간두뇌의 기능과 인지, 그리고 인간행동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연구했다. 이 책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했다. 흥미로운 것은 신

3) 정치적 온정주의는 나의 경제적 실패는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고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이다. 자유사회의 헌법의 근본이 되는 개인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교체한 것이다. 사법(司法)적 온정주의는 범죄는 개인의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것, 그러니까 범뢰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뢰자를 법원과 형무소 대신에 정신치료를 위해 병원에 보내거나 관대한 처벌을 과하는 것은 그 같은 온정주의의 결과이다.

4) 이는 2002년 필자가 한글판으로 번역, 자유기업원에서 출판되었다.

경과학자들은 그를 현대적 신경과학의 선구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⁵⁾

더구나 그는 유명한 1960년 저서 『자유의 헌법』 제5장 <책임과 자유>에서 “의지의 자유냐, 결정주의냐”의 논쟁을 “지적 혼란(intellectual muddle)”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Hayek, 1960/1995: 130-133).

하이에크가 50년 전에 말한 바로 그 지적 혼란에 빠져있는 있는 신경과학의 인식을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혼란을 극복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첫째로 하이에크의 『감각적 질서』에 기술된 그의 두뇌이론의 관점에서 신경과학이 제시하는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 주제가 타당하냐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하이에크의 『자유의 헌법』이 제시하는 그의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신경과학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자유의 헌법의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여 자유주의 이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최종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제II장에서 현대의 두뇌과학이 어떤 인식으로 자유사회의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는가를 다룰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의 관점에서 인간행동의 물리화학적 인과성에 대한 신경과학의 주제가 타당한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제IV장에서 하이에크의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신경과학의 주장과 그리고 신경과학의 인식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 제V장에서는 자유와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신경과학의 공과를 설명하면서 자유와 책임은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결정론과 부합한다는 것, 의지의 자유 개념은 전혀 쓸모없는, 그래서 내버려야 할 개념이라는 결론을 요약할 것이다.

5) 예를 들면 신경과학으로 유명한 퍼스터(J. Fuster)는 자신의 1995년 저서 『대뇌피질의 기억 (Memory in the Cerebral Cortex)』에서 하이에크를 "나에게 영감을 준 인물은 많지만 그래도 각별한 영감을 준 인물은 고(故) 하이에크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는 대뇌피질 이론의 최초의 선구자이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경다윈리즘』으로 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에델만은 하이에크가 진화를 신경에 적용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격찬하고 있다(Edelman, 1982: 24). 그는 두뇌의 특수한 신경세포와 외부세계로부터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헵(D. O. Hebb)이 개발한 시냅스("Hebbian Synapse")을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I. 자유사회의 헌법질서에 대한 신경과학의 도전

신경과학은 잘 알려져 있듯이, 실험실의 실험을 통해서 신경시스템, 특히 두뇌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자유와 책임에 관한 신경과학의 인식은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인간두뇌의 작동원리, 이것은 인간두뇌는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라는 주제이다. 둘째로 인간행동은 물리화학적인 인과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결정주의, 세 번째로는 그 같은 인과적 고리의 바깥에서 인간행동을 조종하는 실체의 존재, 즉 의지의 자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책임도 말할 수 없다는 주제이다.

1. 중앙사령탑이 없이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

신경과학은 인간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에 따르면 인간두뇌는 첫째로 외부환경이나 신체에서 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 형태의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저장하는 기관이고 둘째로 이 저장된 지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파악한다.

어떻게 이 같은 두뇌구조가 형성되었는가? 신경과학은 그것을 시행과 착오와 선택이라는 장기적인 진화과정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뇌구조는 인간들이 살아온 자연적 사회적 환경조건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두뇌구조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계에 관한 지식과 이 지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다.(Singer, 2006),

신경과학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동일한 물리화학적 원리에 따라 기능한다. 둘째로 인간두뇌는 수백억 개의 세포들과 이들의 수없이 많은 상호간의 연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결들은 수시로 변경된다. 그래서 위버의 시스템 분류에 따르면(Weaver, 1967; 민경국, 1997: 61-85)⁶⁾ 인간두뇌는 단순계가 아니라 단연 복잡계에 속한다.

셋째로, 인간두뇌는 여러 개의 부분들(영역)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각각 복잡한 하부시스템들이다-지식의 가공과 처리, 그리고 저장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6) 그는 시스템을 단순계와 복잡계로 분류한다. 단순계의 특징은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들의 관계의 수효가 소수이다. 그 관계도 정태적이다. 이에 반하여 복잡계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들의 관계의 수효도 무수히 많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잡계의 대표적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장시스템이다.

분권적이고 제각기 전문화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뇌는 어떤 단일의 사령탑이 없다는 신경과학의 네 번째 주제이다. 분권적이고 분업적인 각 신경영역들의 독립된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⁷⁾.

인간의 특정한 행동은 그 어떤 사령탑이 없이도 여러 가지의 분권적인 영역들의 활동이 자생적으로 조정되는 과정, 즉 두뇌의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다.

2. 인간행동의 신경결정론

두뇌가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이 결정되는가? 인간행동의 결정요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 축적된 유전적 지식
- 개인이 겪어온 역사경로를 통해 습득하여 신경네트워크에 저장된 경험지식
- 의사결정 시점의 환경이 주는 신호나 자극

두뇌는 축적된 지식과 그리고 상황과 결부된 신호들을 가공하여 행동을 산출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같은 가공과정은 오로지 신경작용이고 이 신경작용은 물리화학적 (인과적) 법칙성을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경과학은 이 같은 결정주의를 "신경결정론(neuronal determinism)"라고 부른다. 인간행동의 자연주의적 결정론(naturalistic determinism)이다.⁸⁾

요컨대,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자연현상과 똑같이 물리화학적 인과관계의 법칙성에 따르는 신경과정의 결과 이외에는 그 어떤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것 이외의 그 어떤 특질이나 실체(Substance)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정신의 존재론적 범주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물론(materialism)이다.⁹⁾

7) (Goschke, 2009: 127; Edelman, 1992; Fuster, 1995; Singer, 2004)기타 이와 같이 생각하는 문헌에 대해서는 기포드(Gifford, 2007: 269)를 참조 그가 열거한 인물들을 보면 두뇌는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이 보편적 의견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8) 신경들의 연결망(interconnection)이 우리를 꼭 묶어놓고 있다.(Singer, 2004: 30)

3. 의지의 자유 개념에 대한 비판

신경과학은 신경결정론과 연결하여 의지의 자유 개념을 논한다. 신경과학이 그 존재를 부정하는 의지의 자유 개념은 무엇인가?

(1) 중앙사령탑의 존재: 의지의 자유는 두뇌에 “사령탑(central steering instance)”로서 “의식적인 자아”(I; Ich; Self; Selbst)의 존재를 전제한다. (Goschke: 2008: 113).¹⁰⁾ 그 사령탑이 “자유로운 의지자 (free-willer)” (Wegner, 2002: 322)이다.

(2) 사령탑의 존재위치: 그 사령탑은 물리적 인과관계의 고리 바깥에 존재한다. 로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Roth 2003: 498): “자연현상은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의지력은 이러한 원리의 바깥에 존재해야 한다.”

(3) 사령탑의 역할: 사령탑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두뇌의 신경과정을 조종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다. 이 의지력을 통해서 두뇌의 신경과정의 행동결정을 조종하고 통제한다. (Goschke, 2008: 108).

(4)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해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달리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 의식적인 자아, 사령탑 등의 개념은 모든 자연현상처럼 인간도 물리화학적인 인과적 결정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신경과학의 인식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다. 그 개념들은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맞지 않는다. 신경과학의 인식은 두개골을 들여다보거나 실험을 해보니 그 같은 형이상학적(metaphysical)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5) 합리성과 의지의 자유: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하거나 여러모로 저울질하여 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의지의 자유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9)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실체를 인정할 경우, 비물질적 정신이 두뇌에 어떻게 인과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비물질적 실체가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신이 육체를 조종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뇌가 존재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Goschke, 2009: 112)

10) 싱거는 이를 사령탑(Kommandozentrale)”이라고 말한다(Singer, 2004b: 43).

그러나 이 같은 자유의 의지 개념도 두뇌에 대한 신경과학의 이해와 양립할 수 없다. 의식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논증을 따져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두뇌의 신경작용을 통해 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신경과학의 인식이다.¹¹⁾

(6)의식성과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 개념은 의식적인 행동결정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이는 두뇌의 스스로 조직하는 전체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행동결정의 무의식적 과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무의식적 행동결정에서는 행동결정요인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행동이유도 말할 수 없다.(Singer, 2004: Gifford, 2007: 274).

요컨대, 의지의 자유 개념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신경과학의 인식이다. 인간행동의 자연주의 인과성 그리고 무의식적 행동, 이것이 신경결정부의의 핵심이다.

4. 자유사회에 대한 신경결정주의의 도전

신경과학의 핵심은 이렇다. 즉, 우리의 행동은 스스로 조직되는 두뇌 속에서 물리화학적인 인과원리에 따르는 신경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의지의 자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죄도 없고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Singer, 2004: 31). 자신의 결정이 원한 것이든,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든 무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든 관계가 없다.

신경결정주의는 자유와 책임의 불가분성을 전제하는 자유사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사회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이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유명한 1960년 저서 『자유의 헌법』에서 말하듯이, “자유는 한편으로는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 짐이다.”(Hayek, 1960/1995: 128). 자유가 개인에게 기회만을 의미하고 책임을 부정한다면 인간들의 다양한 행동들의 의미 있는 “조정(coordination)”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는 ‘척박하고 잔혹한 그리고 외로운’ 상황을 상징하는 “홉스의 문제(Hobbsian Problem)”가 야기한다.¹²⁾

11)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실체를 인정할 경우, 비물질적 정신이 두뇌에 어떻게 인과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비물질적 실체가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신이 육체를 조종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뇌가 존재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Goschke, 2009: 112)

12) 2007년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도 금융질서에서 책임원칙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민경국(2008)

독일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창시자였던 발터 오이켄은 사유재산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과 나란히 책임원칙을 자유사회의 법질서의 기반이 되는 원칙으로 여겼던 것도 (Eucken, 1952/1995), 그 같은 홉스의 문제 때문이다. 독일 헌법학자 디 파비오가 책임원칙을 "헌법적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유와 책임의 불가분성을 표현한 것이다.(Di Fabio, 2002).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와 책임에 관한 신경과학의 인식이 옳은가의 문제이다.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이론으로서 신경결정주의가 옳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이에크의 『감각적 질서』의 관점에서 다를 것이다. 이것이 옳지 않다면 신경과학의 인식은 자유사회에 대하여 별로 관련이 없다.

다른 하나는 신경과학의 신경결정주의가 옳다면 이것이 정말로 자유사회와 갈등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도 역시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다를 것이다. 그의 관점은 『자유와 헌법』과 그리고 이 에 수록된 <자유와 책임>의 내용이다. 하이에크는 이 문헌에서 ‘결정론이나, 의지론이나’의 논쟁을 “유령 같은 문제 또는 ” 지적 혼란“이라고 말한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III.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의 관점에서 본 신경과학

하이에크의 『감각적 질서』는 21세 되던 1920년에 썼던 원고, 『의식의 발전이론』을 1952년에 현재의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유럽의 지적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사회주의를 뒷받침했던 행동주의와 실증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썼던 책이다. 이는 칼 멩거(C. Menger) 이래 개발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식론적 기초로서 주관주의, 암묵적 지식, 그리고 신경결정론, 인간지식의 한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이원주의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들은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상의 인식론적 기초이다.(민경국, 2007).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하이에크의 그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신경과학의 신경결정론이 온당한가의 문제이다.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계로서 파악하는 것, 무의식적 두뇌작용과 무의식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등, 신경과학의 인식은 하이에크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 특히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 주제는 하이에

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이들을 설명하면서 신경과학의 인식과 하이에크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세 가지 종류의 질서

하이에크는 『감각적 질서』에서 세 가지 질서를 구분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i) 물리적 질서 ii) 신경감각질서 iii) 정신질서(Hayek, 1952: .39). 하이에크의 핵심주제는 첫 번째 질서와 나머지 두 질서사이에는 동형성이 없는데 반하여 정신질서는 신경질서와 동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질서는 물리화학적인 법칙성에 따르는 두뇌와 신경계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점이다.

수억 개의 세포들로 연결된 신경질서는 외부세계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신호를 분류하고 인지하고 해석하는 분류장치라고 말한다. 이는 타고난 지식과 그리고 개체가 삶의 역사에서 얻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개인에게 고유한 외부세계에 대한 지도(map) 또는 모델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¹³⁾

바로 이 같은 분류장치에 의해서 외부세계의 물리적 자극이 정신적 질을 획득한다. 예를 들면 물리적 속성의 철붙이를 화폐로, 또는 “재화”로 인식하는 것, 이들은 모두 물리적 속성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정신적인 질로 전환된 것이다. 도구라는 개념은 물리적 대상을 물리적 속성대로 인지된 결과가 아니라 그 대상의 용도에 대하여 생각하는 믿음, 태도, 의견이다.

그래서 분류나 인지는 언제나 주관적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관주의의 기초이다. 따라서 사회과학 또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여건은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는 “객관적” 여건이 아니라 주관적 여건이다.¹⁴⁾

물리적 세계를 재화의 세계로, 물리적인 대상을 경제적 자본으로 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두뇌(신경)작용이다. 물리적, ‘객관적’ 사물에 대한 의견, 태도, 가치, 세계관, 개념적 사고와 같은 이른바 비물질적인 것(비물리적인 것)도 물리적 질서의 여건들에 대한 신경작용의 결과이다.

이상의 내용이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의 간단한 관점이다.

13) 하이에크는 ‘대뇌피질 기억의’ 연결’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퍼스터가 말하고 있듯이 (Fuster, 1995: 88), 주요토픽은 인지이다. 인지는 기억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원천이다. 하이에크는 인지를 분류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14) 하이에크를 "과학적 주관주의"(Caldwell, 2004: ?)로, "자연주의적 주관주의"(Vanberg, 2004: 180)라고 해석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에크를 흄과 칸트를 연결시키는 매개혁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2. 결정론과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신경과학의 신경결정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은사였던 미제스와 마찬가지로¹⁵⁾ 그에게도 의지의 자유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을 부정한다.

하이에크는 신경질서와 정신질서의 동형성을 말한다. 그에게 정신과정은 신경질서의 물리화학적 과정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인간행동도 그 같은 신경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도 “신경결정주의”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를 명시적으로 증해주는 것은 하이에크는 『감각적 질서』의 마지막 제8장 <철학적 귀결>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Hayek, 1952: 193)

"이 같은 생각들은 '자유 의지'에 관한 오래된 논쟁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 세계에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가 모든 인간행동은 **물리적 과정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일반 원칙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특정한 행동은 특정한 물리적 환경의 필연적 결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강조는 필자)"

하이에크는 1960년 저서 『자유의 헌법』에서도 의지의 자유개념을 부정하고 결정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Hayek, 1960/1996: 133-134):

"외적 환경에 대한 반응, 즉 어떤 순간 개인의 행위는 그의 유전적 소질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해석된 새로운 경험이 함께 영향을 미쳐 결정된다. -----결정론적 입장이 주장하는 바는 유전적 소질과 과거경험의 축적된 효과가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며 외부 내지 물질적 영향에서 차단된 '자아'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결정주의는 신고전파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에서 볼 수 있듯이.¹⁶⁾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과 같은 단순계에서나 볼 수

15) 자유의 의지를 부정하고 결정론에 우호적인 인물은 하이에크의 은사이자 하이에크와 함께 오스트리아 학파를 발전시킨 자유주의자 미제스이다. (Mises, 1949/1963: 46): “선천적이고 타고난 생물학적 질과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그에게 미친 모든 영향이 그의 인생행로에서 어느 한 순간의 그를 만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운명이다. 그의 의지는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지는 자신의 배경과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영향들에 의해 결정된다.”

16) 신고전파 경제학의 미시와 거시경제학과 같이 복잡계를 단순계로 축소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결정주의는 무용지물이다.

있는 결정주의는 아니다. 복잡계에서 결정주의는 일반적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종류와 관련된 것이다¹⁷⁾

3.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서 두뇌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경과학이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도 하부시스템들(두뇌의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신경부위들)에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계획하는 중앙사령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적 후생함수가 없는 것처럼, 두뇌에도 효용함수도 없다. 신고전파는 사령탑과 효용함수 그리고 사회적 후생함수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 분권적 두뇌작용은 진화적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은 하이에크가 의미하는 “지식의 문제(knowledge problem)”와 관련되어 있다. 중앙사령탑이 의식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부시스템들을 조종하려면 이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각처에 분산된 지식)을 전부 수집가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분권적인 각 영역의 지식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영역들의 경쟁을 통해서 그 충돌이 스스로 해결된다.¹⁸⁾

그러나 신경경제학자들은 우리의 두뇌가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라는 이유로 그것을 자생적 질서로 이해한다. (Gifford, 2007: 270; Horwitz, 2000).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하이에크가 그의 생애동안 진력을 다하여 개발한 개념으로서 자생적 질서는 인위적 질서(조직)도 아니고 자연적 질서도 아닌 제3의 질서다. 그러나 두뇌는 자생적 질서가 아니라 자연적 질서이다¹⁹⁾. 자생적 질서에 속하는 것은 시장경제, 언어나 법, 화폐 등, 인간사회이다.

17) 하이에크는 두 가지 종류의 결정주의를 말하고 있다. 단순계의 결정주의와 복잡계의 결정주의의 구분이다. 그가 수용하는 결정주의는 복잡계에서는 “원리의 설명”, “패턴예측”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이다..(Hayek, 1967). 그는 복잡계의 설명원리의 대표적인 예가 다윈의 진화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하이에크/민경국, 1989: 84-85, 78-82).

18) 사령탑의 존재는 두뇌이든 사회주의이든, 간섭주의 경제이든 항상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하이에크가 의미하는 “분산된 지식 사용의 문제”이다.(Hayek, 1948/1996 제2, 제3장). 그러나 시장경제와 같이 두뇌도 분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같은 지식의 문제가 없다.

19)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ayek, 1952: 178). “정신은 물리적 우주의 한 특수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질서이다. 바로 그 우주의 한 부분은 개체로서 우리 스스로이다.”

4.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두뇌과정

인간행동의 결정(또는 외부세계에 대한 인지)에서 무의식적 두뇌과정에 대한 신경과학의 인식도 하이에크의 관점과 큰 차이가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의식(consciousness)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생리학적으로 신경망에 축적된'(Hayek, 1952: 167), 재치, 재주, 어감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 정의감이나 법 감정, 문화나 어법 등과 같은 초 의식적 행동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Hayek, 1967: 45).²⁰⁾ 행동이전의 인지와 정신적 과정도 수많은 초 의식적 규칙들의 결합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두뇌는 의식적인 정보이용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포괄적인 저장된 지식을 동원할 수 있는 이유가 두뇌의 무의식적 과정 때문이다. 이는 진화적 선별에서 매우 유익한 역할을 했다. 더구나 의식적인 의사결정도 수많은 무의식적인 두뇌과정의 도움에 의해서 준비되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신경과학의 인식도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Weimer, 1982: 245).²¹⁾

많은 사람들은 하이에크의 지식이론을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지만, 신경과학은 이런 비판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그의 지식이론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5. 설명의 한계와 방법론적 이원주의

인지과정, 사고과정, 행동결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과정이란 물리화학적 과정 이외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연적 질서, 물리적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하이에크나 신경과학의 공통된 생각이다.

신경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두뇌작용과 행동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이다. 설명되는 것도 우리의 두뇌다. 두뇌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지적 도구를 이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명이 얼마나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한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신경과학을 평가할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간 정신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분류장치는 분류대상보다 더 복잡해야 분류대상을 분류할 수 있다는 논리에 해당된다..(Hayek, 1952: 185)²²⁾ 다시 말하면 인간 두뇌는 물리적 질서가

20) “인간행동은 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는 미체스의 명제에 대한 스미스의 논평은 스미스(Smith, 1999: 200)를 참조

21) 하이에크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를 인용하여 무의식적 두뇌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ayek, 1949/1998: 131).

신경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것으로 번역되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 논리적 불가능성을 하이에크는 절대적(absolute) 한계라고 말한다.

신경과학자들도 인간행동과 정신과정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우리의 계산능력에 비하여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Roth, 2003: 507).²³⁾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 같은 한계를 절대적 한계가 아니라 실천적(practical) 한계라고 말한다.

인간정신이 자신의 활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다시 정리하면, 정신적 과정이란 물리화학적 과정 이외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리적 질서라고 해도 자연과학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이 같은 생각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신경과학은 정신과 육체에 대하여 엄격히 일원론이다. 정신의 존재론적 범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하이에크도 그 같은 범주를 부인하지만 그러나 정신은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는 실용적인 이원주의를 택하고 있다(Hayek, 1952: 191)²⁴⁾

실용적 이원주의의 두 번째 의미는 하이에크는 사회과학의 독자적인 존립을 강조한다. 정신질서는 물리-화학적 과정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자연적 질서이기기는 하지만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이에크는 인간행동이나 사회적 현상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1942년 저서 『이성의 남용과 타락』에서 과학주의라고 비판한다(Hayek, 1959/1979: 56-69).

하이에크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22) 인간두뇌는 자기 자신의 작동메커니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 같은 설명을 위해서는 인간두뇌보다 더 복잡한 구조의 두뇌가 필요하다.

23) “인간행동이 특정한 정도의 복잡성을 넘어서게 되면 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두뇌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이를 이해할 수도 없다. 그 복잡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불가능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Roth, 2003: 507).

24)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Hayek, 1952: 191): “우리에게 전체로서 정신은 물론 개별적인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 산출되지만 그러나 물리적 범칙의 의미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영구적으로 특수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정신현상은 물리적 과정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꺼이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정들에 관한 논의에서 정신적 용어의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구적으로 **실용적인 이원주의**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실용적 이원론은 두 부류의 사건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 필자]의 객관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속해있는 통합된 질서를 이해하는데 정신력의 한계에 기인한다.”

접근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내관적 이해방법(understanding Method)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막스 베버이래 적용된 해석학적(hermeneutic)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여 일반적 조건하에서 정신과정이 야기하는 패턴적인 결과를 이해하거나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Hayek, 1952: 192). 두 번째로 상세한 설명(explanation of detail) 대신에 원리의 설명(explanation of principle)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패턴 예측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²⁵⁾

실용적 이원론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같은 실용적 이원론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한편에서는 자연에 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속한다. 신경과학이 인간의 이 같은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6.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

하이에크는 두뇌이론에서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정신은 자기 자신의 작동과정을 완전히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수 많은 인간 정신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장과정을 비롯하여 사회적 과정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외부세계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선별적으로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국면만을 추려내어 인지한다. 외부세계에 대한 인지란 분류도구를 통해 현실을 분류하고 해석한 결과이다. 외부환경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미치는 외적 사건의 객관적인(물리적인) 속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분류장치에 달려 있다. 로애스비가 해석하고 있듯이(Loasby, 2004:103), 그 분류시스템은 “주관적”이다. 그 속에는 타고난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습득한 고유한 지식을 담고 있다. 세상을 해석하고 인지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이는 하이에크가 멩거 전통의 오스트리아 학파 핵심으로서 주관주의를 두뇌이론으로 뒷받침하는 맥락이다. 이것이 앞에서 논의한 정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의 절대적 한계 주제와 함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말해준다(임일섭, 2000: 88-89).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류 가능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지가 선별적이

25) 하이에크가 그의 유명한 논문<복잡한 현상에 관한 이론>(1967)과 그리고 『감각적 질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듯이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전자의 논문은 하이에크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문예출판사 (1989)에 수록 되어 있음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적 지식을 산출하는 분류도구나 인지 도구 그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Hayek, 1952: 109~110).

따라서 인간 이성의 무지는 구조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unknown ignorance).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인간들이 이 같은 구조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타인들과 상호관계를 갖는 사회적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하이에크가 두뇌이론에서 사회이론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신경과학이 간과한 문제이다.

7. 중간 결론

앞에서 우리는 하이에크의 두뇌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에 대한 신경과학의 인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하이에크의 두뇌이론과 신경과학의 두뇌이론의 인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이에크는 실용적 이원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것은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는 두뇌이론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 사회가 필요한가를 찾아내고 있다. 그래서 신경과학과 하이에크가 신경결정론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다르다. 이 차이점이 이제 설명할 하이에크의 제도경제학적 관점에 반영되고 있다.

IV. 하이에크의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신경과학

하이에크의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이 자유사회와 모순된다는 신경과학의 주장이 옳은가의 문제를 분석할 차례이다

하이에크는 현대적 신경과학이 나오기 전이었던 1960년 발간된 『자유의 헌법』에서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과 자유사회는 서로 충돌하고 의지의 자유 개념과 자유사회가 양립한다고 보는 시각을 “유령과 같은 문제(phantom problem)” (Hayek, 1960/1995: 131), 또는 “지적 혼란(intellectual muddle)” (ebenda, 131) 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오늘날의 신경과학이 50년 전에 하이에크가 말한 바로 그 지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이다. (1)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하이에크가 지적 혼란을 말하고 있는가? (2) 우리가 그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경과학의 지적 혼란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신경과학의

인식에 대한 일반적 반응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제도경제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1. 신경과학과 제도경제학의 필요성

1) 신경과학의 인식에 대한 일반적 반응: 신경과학의 주장이 나오기 전 많은 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냐 결정론이냐의 문제는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라고 믿고 한편에서는 결정론을 수용하기도 했고 다른 편에서는 의지론을 수용하기도 했다. 전자는 사회주의 편이었고 후자는 자유주의 편이었다. 또는 그 어느 편도 아닌 학자들은 절충주의를 택했다. 의지의 자유를 지지하는 편에서는 응보론을, 결정주의를 지지하는 편에서는 예방론을, 그리고 절충주의를 택하는 측에서는 역시 두 형벌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의지의 자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결정주의야말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신경과학의 인식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좌경화된 학자들은 자유와 책임은 헛소리라는 것을 더욱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유와 책임의 상호보완성을 자유주의의 헌법적 원칙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도전했다.

경제적 온정주의로 복지국가의 확대 또는 교화 또는 형벌의 경감의 형태를 의미하는 사법적 온정주의를 더욱 더 요구했다. 더구나 형벌론으로서 예방이론 가운데 특별예방론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자유주의 측에서도 결정주의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면 자유와 책임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이를 버리면 자유주의이념은 철학적 근거가 없고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리이다. 여기에 자유주의의 딜레마가 있다고 믿었다.

해결책이 자유의 의지는 유용한 허구라는 개념을 개발했다. 의지의 자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허구이고 환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환상적인 이유가 우리의 행동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를 완전히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것이 유용한 이유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책임 원칙을 환상적인 의지의 자유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사 의지의 자유(as if freedom of will)는 응보이론의 훌륭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주장은 신경과학이 말하는 자유와 책임은 개인적 현상 또는 개별인

간의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에서나 의미 있는 자유와 책임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만으로는 신경과학의 인식과 그리고 유용한 환상 개념을 비판하기에 부족하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이에크의 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신경과학의 인식은 물론 이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의 반응도 지적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2.) 제도경제학적 관점의 필요성: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이에크가 왜 자유와 책임 문제를 그의 『자유의 헌법』에서 다루었는가의 문제이다. 하이에크의 출발점은 인간들의 상호작용은 제도의 공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게임규칙이 없이는 결코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모든 종류의 게임에는 나름대로의 게임규칙이 있다. 시장경제라는 캐탈락시(catallaxy) 게임도 예외가 아니다. 규칙, 즉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는 노스가 정의하듯이,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틀” 또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계약”(North, 1992/ 1996: 14-15) 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조종하여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행동규칙이다.

하이에크는 1948년 논문집 『개인주의와 경제질서』가 보여주고 있듯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고유한 지식이론의 관점에서 시장사회의 기능원리를 규명한 다음에 이 기능조건으로서 제도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가 1960년 논문집 『자유의 헌법』이다. 이 같은 연구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행동, 시장경제의 기능원리 그리고 기능을 위한 제도적 조건, 이 세 가지 연구가 경제학의 3위 일체이다.

이 저서에서 하이에크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의미 있는 사회질서가 구성되기 위한 도덕적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자유와 도덕, 정의, 법, 법치주의, 정치제도 등,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접근법은 독일어권의 질서경제학(민경국, 1997), 뷰캐넌 등의 버지니아 학파의 헌법경제학(민경국, 1993)이라고 부른다. 신고전파 제도경제학,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제도경제학 등, 제도 경제학도 다양하다. 하이에크의 제도경제학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제도경제학에 속한다.

엄밀히 따지면 각 학파들 사이에는 인식론이나 세계관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각기 토마스 쿤(Th. Kuhn)이 의미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그 공통점은 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래서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제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제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Vanberg, 2010: 9). 첫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둘 이상이 사는 사회의 차원이다(Gazzaniga, 2005: 100). 둘째로 제도의 문제는 사회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로 제도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미래 전망적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조건이 필요한가의 애덤 스미스(A. Smith)의 문제제기이다. 사회제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구성원들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제도의 문제는 기능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라카토스(I. Lakatos)가 의미하는 연구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볼 때, 신경과학과 『감각적 질서』가 다루는 것은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문제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인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인간 개체가 어떻게 환경을 인지하고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설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반베르크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Vanberg, 2010: 8-9), 첫째로 개인의 두뇌작용과 그의 행동이라는 개인적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이다. 둘째로 심리적이다. 셋째로 설명은 논리적으로 과거 회고적이다. 현재의 행동에 미친 과거의 영향들,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 행동을 결정할 순간의 외적 자극과 신호 등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제도의 문제와 행동설명의 문제는 연구프로그램 관점에서 전혀 상이한 문제임에도 신경과학은 물론 그 인식에 대한 반응자들도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이에크가 이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용적 이원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그가 말하듯이(Hayek, 1948/1996: 190),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해있는데, 인간은 전자의 결과이고 후자의 원인이다. 물리화학적 과정의 산물이지만 결코 이에 환원될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의 산물이 사회질서이다.

더구나 이는 자생적 질서이다. 인간의 의도나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는 심리적 현상과도 관련이 없다. 행동설명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신경과학이 그 같은 중요한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겪어온 지적 또는 개념적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하이에크의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신경과학의 인식을 평가하면서 “지적 혼란” 또는 “개념적 혼란”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유개념: 의지의 자유 대신에 행동의 자유

신경과학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책임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가운데 전반부의 “자유롭지 못하고”의 자유는 “의지의 자유” 개념이다. 신경과학은 인간두뇌의 인과적 결정과 무의식적 과정을 들어 의지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같은 자유개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자유사회의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는가?

현대 신경과학이 하이에크가 지적한 지적 혼란에 빠진 것은 “의지의 자유”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의지의 자유는 내적 자유에 속하는 형이상학적 주관적, 심리학적 개인적 현상이다(Hayek, 1960/1995: 37-38).²⁶⁾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해당되는 자유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같은 자유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학적 범주이다. 신경과학이 이 같은 의지의 자유개념을 채용한 것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인간의 두뇌연구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들의 관계와 관련된 제도와 제도의 기능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자유 개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자유개념이다. 그래서 자유는 사회학적 개념이 적합하다. 이를 강조한 인물은 하이에크의 은사였던 미세스이다. 1951년 저서 『사회주의』에서 "사회를 벗어난 조건에 자유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Mises, 1951: 191). 또 1949년 저서 『인간행동론』에서 “인간들의 관계를 지칭하는 경우에만이”(Mises, 1949:279) 자유가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이에크도 물론 자유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조건”이라고 말한다(Hayek, 1960/1995: 33) 이런 자유는 강제나 사기, 기만이 없는 상

26) “내적 자유는 순간적 충동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신중한 의지, 이성 또는 변하지 않는 확신에 의해서 인도되는 정도를 가리킨다. 내적 자유의 반대는 강제가 아니라 일시적 충동, 또는 도덕적 지적 취약성이다” (Hayek, 1960/1995: 338)

태이다(ebenda, 32). 이런 상태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의 자유”이고 법으로 보호받을 자유개념이다.(Hayek, 1960/1995: 29쪽 이하) 이는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행동규칙을 통해 확립된다.

이 같이 확립된 사적영역에서 외부의 강제가 없는 한, 자유롭다.(Hayek, 1960/1995: 38). 강제가 없는 한, 우리의 행동이 무의식적 두뇌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든, 일시적 충동이나, 합리적인 고려, 또는 변하지 않는 신념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든 관계없다(Vanberg, 2010: 13). 타인의 강제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그는 자유롭다(Hayek, 1960/1995: 33).²⁷⁾

흥미로운 문제는 행동자유 존재이유로서 그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이다. 그 기능은 윤리적 기능, 지식의 기능, 번영의 기능 등, 하이에크의 『자유의 헌법』은 자유의 중요성을 다룬 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우리가 잡고 넘어갈 점은 행동설명과 관련된 심리학적 의지의 자유 개념은 그 같은 사회적 기능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경과학이 의지의 자유를 포기하고 대신에 행동의 자유를 채용하는 것이 자유와 책임의 상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3. 가상적 의지의 자유

흥미로운 것은 자유의 의지와 관련된 호르위츠의 해석이다(Horwitz, 2010: 285-286) 그는 유명한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자이다. 그에 의하면 정신은 의미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하이에크와 같이 정신은 두뇌과정의 창발적 결과라고 말한다. 그래서 선택은 물리적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사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신경과학 또는 두뇌생물학이라고 한다. 인간의 선택행위의 물리적 기초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입장에서 그는 선택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과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원주의를 반대한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하

27)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출구가 단 하나 밖에 없는 위험한 암벽에 매달려 있는 등반가는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자유롭다” (Hayek, 1960/1995: 33)

이에키안이다.

하이에크처럼 호르위츠는 선택이나 기타 정신적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두뇌 속의 생물학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이 물리적 과정을 자연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자”라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고 그 같은 믿음을 “실용주의적(pragmatic)이라 말한다.

이 같은 주장은 분명히 자유의 의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인간정신은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 개념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흥미롭게도 결정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책임 원칙을 살리기 위해 의지의 자유개념을 “유용한 환상”로서 또는 “마치 자유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mpsey, 1996; Gifford, 2007: 286). 환상인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이를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마치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유용한 이유는 의지의 자유가 뒷받침하는 책임원칙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책임 원칙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Wegner, 2003, Ch. 9).

그러나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의지의 자유 개념은, 이것이 행동결정 원인의 불완전한 지식에 근거하든, ‘진화적 부산물이든’(Shermer, 2008/2009: 418), 또는 “두뇌의 창발적 특질” 이든 (ebenda, 419),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도덕적 법적 범주에 속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로운 선택은 사기, 기만 또는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다.

4. 책임원칙: 심리적 개념 대신에 사회적 규약

인간행동은 인과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신경과학은 책임원칙을 의지의 자유 개념에 의해 정당화하고 있다. 인간행동은 인과 고리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결정은 완전히 의식적인 자아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도 죄도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책임과 죄의 개념도 심리학적이고 개인적 현상이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사는 사회적 세계를 다루는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

면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부여는 행동 설명의 차원에서 보는 심리적 의미와는 다르다. 하이에크가 강조하듯이(Hayek, 1960/1995: 136), 책임부여는 인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만 의미있는 "사회적 규약(social convention)"이다. 이는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규칙,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타인들에게 끼친 피해를 죄로 여기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칙의 성격을 갖는다.(Vanberg, 2010: 13). 이 규칙들이 가짜니가가 정확히 표현하듯이 (Gazzaniga, 2005: 100),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이다.

그런데 제도경제학이 중시하는 것은 그 같은 책임규칙의 사회적 기능이다. 책임부여는 "책임을 믿지 않을 때 하는 행동과는 장차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한"(Hayek, 1960/1995, 134-135) 것이다. 그것이 "비교 가능한 미래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²⁸⁾ 게임이론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변절자에 책임을 부여하여 비협력적 게임을 협력적 게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Gifford, 2007: 284).

책임부여의 사회적 기능이 학습을 통한 행동변화의 유도라면 이 같은 기능을 위해서는 책임주체에 대한 전제도 필요하다. 행동결과에 대한 자타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최소의 능력이다(민경국, 2007: 354-356). "책임부여는 학습하고 예견하는, 즉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지식에 의해 조종되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한다.(Hayek, 1960/1996: 137)²⁹⁾.

형법분야에서 책임 원칙의 사회적 기능은 범죄를 미리 예방하거나 방어한다는 의미에서 예방적 또는 방어기능이다. 경제 분야에서 책임기능은 첫째로 스스로 가진 자원이나 지식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개인들의 관심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Hayek, 1960/1996: 129).

이것이 책임주체의 조건이다. 백치, 정신분열증환자 등, 특정한 뇌손상 때문에 이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부여는 소망스러운 방향으로의 행동조종 효과를

28)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ibenda, 135): "어느 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과실이나 부주의로 타인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를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는 이유도 그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서 장차 그런 경우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9) 행동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속에 둔 목표관에 비춘 미래지향적인 행동선택을 가능하게 한다(Goschke, 2009: 118)

기대할 수 없다. 인간행동을 조종한다고 해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행동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암시하는 식으로 그것을 미세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정신(/두뇌)이 스스로를 완전히 설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행동을 자의적으로 통제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 개인들의 책임영역의 확립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³⁰⁾ 제도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대 신경과학이 책임과 죄 개념을 개인적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책임의 사회적 규약으로 교체하는 경우 하이에크가 말하는 지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5. 자유의 헌법: 의지의 자유 대신에 결정주의

책임을 부여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장차 다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Hayek, 1960/1995: 134). 이로써 그들의 행동들이 상호간 의미 있게 조정되도록 하는데 있다. 책임부여는 개인들이 보다 신중하게,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교육적 목적, 또는 법이나 도덕률을 지키도록 준법정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ebenda: 136).

이제 문제는 책임 원칙이 이 같은 사회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이 인과적 결정론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그 같은 인과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이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대답은 결정론이다

책임부여는 원인이다. 이 책임원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책임 부여의 결과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책임원칙은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가 없이는 책임원칙의 사회적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인과적 결정성 때문에 사람들은 책임원칙에 용이하게 반응할 수 있다 (Gifford, 2007: 286)³¹⁾

30) 예를 들면 물가인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부동산 가격인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 이런 것은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고 책임의 한계도 없다. 그 같은 책임을 개인들에게 부과한다면 그들은 어떤 행동이 처벌을 받을 행동인가, 어떤 행동이 무책임한 행동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알 수 없다.

31) 판베르크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책임원칙만이 아니라 행동규칙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행동을 조종하는 제도개혁의 기본적 전제는 결정주의다.(Vanberg, 2010: 11) 인간행동

그런데 의지의 자유 개념이 정말로 책임원칙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보자. 의지의 자유는 웨그너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듯이(Wegner, 2002: 322-323).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도 좌우되지 않고 과거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하지 않는 행동이다. 따라서 의지의 자유는 “변덕스러운 미결정성”과 같다. 행동이 우연적이다.(Goschke, 2009: 114; Gifford, 2007: 273). 이와 같이 행동의 미결정성(indeterminism)은 전적으로 목적 없는(random) 행동이다(Pauen, 2008: 11).

원인 없는 행동, 과거의 그 어떤 경험에도 좌우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이 같은 의지의 자유 개념은 적실성이 있는가? 이 문제는 이미 신경과학이 입증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자(free willer)의 존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자유로운 의지자는 인간행동의 규칙성을, 다시 말하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행동(rule-guided action)”,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인지(rule-guided perception)”(Hayek, 1967: 43-45) 즉 “규칙을 따르는 동물”(하이에크/민경국, 1989: 240)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의지의 자유 개념은 사회질서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유로운 의지자가 사는 세계에서 질서의 형성이 가능한가? 사회를 구성하는 도덕과 관행과 관습 그리고 법 규칙 등과 같은 행동규칙의 존재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상이한 행동들의 의미 있는 행동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칭찬, 처벌과 보상 같은 것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하여 의미 있는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지자들(free willer)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동규칙은 물론 책임 원칙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유의 의지 개념은 사회질서를 위해서도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지의 자유가 책임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책임면제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결정론이 책임개념의 정당한 기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끌어온 “의지의 자유냐 결정주의냐”의 논쟁을 “지적 혼란”이라고 말한 것은 정곡을 찌른다.³²⁾

의 인과적 결정성이 없이는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제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제도경제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이다.

32)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Hayek, 1960/1996: 132-133): “책임개념은 결정론적 건

따라서 “자유의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이 비로소 행위자 개인에 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박상기의 주장(박상기, 2009: 217)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김일수/서보학은 의지론이나 결정론이냐의 문제를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김일수/서보학, 2006: 358),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인간행동은 분명 결정주의이다. 그리고 이 결정주의를 전제할 때 비로소 사회적 규약으로서 사회적 규칙으로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의지의 자유는 사회질서를 위해서도 의미가 없고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도 이 책임 부여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³³⁾ 그들은 그 같은 논쟁이 행동을 설명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자 사회질서의 기반이 되는 제도와 관련된 논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김일수 등과는 달리 이재상은 결정주의냐 의지의 자유냐의 논쟁은 어느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취급할 수 없고 절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듯하다.(이재상, 2008: 292-293). 이 같은 생각도 타당하지 않다.

6. 예방이론에 대한 하이에크와 신경과학

자유의 의지를 부정하고 책임개념을 부정하는 현대 신경과학의 인식에 따른다면 범죄와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자유사회의 법질서, 특히 형법과 형 집행제도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은 책임을 면제할 경우, 사회질서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Roth, 2003: 544). 그래서 교육과 보상 또는 처벌을 통해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oth, 2009; Singer, 2006; Blackmore 1988). 이것은

해에 기초하는 반면에 형이상학적 자아는 인과연쇄의 바깥에 서있기 때문에 칭찬이나 비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래서 의지론은 책임면제만을 정당화시킬 뿐이다”.

33) 의지의 자유를 합리적 행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감정이나 일시적 기분에 치우침이 없이 용의주도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동과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을 합리적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책임 원칙이지 그 같은 행동이 책임부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인과적 결정주의의 전제가 없이는 책임 규칙이 불합리하고 게으르고 무지한 인간을 다소 합리적 인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결과주의 또는 예방론이다. 응보주의(retributivism)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흥미롭다. 액셀로드(R. Axelrod)의 응수전략(tit for tat)을 의미하는 응보이론은 그린/코헨이(Greene/Cohen, 2004: 1777) 말하듯이, 의지의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달리 행동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이에크도 예방이론적 입장이다. 그러나 그의 입장이 신경과학과 같은 입장이라고 해도 그들은 매우 다르다. 자유의 의지를 불신하는 신경과학은 죄가 없음에도 사회질서를 위해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처벌은 가벼울 것이고 따라서 주로 교육과 치료에 치중할 것이다. 하이에크가 비판하듯이 “치료하는 것이 그 같은 입장은 재판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원칙, 잘못은 있지만 죄는 없다는 원칙”(Hayek, 1960/1995: 128) 을 적용한다. 이것이 사법적 온정주의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범법자는 치료받도록 의료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보낼 것을, 따라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주장한다(ebenda). 이 같은 엄격한 예방 조치로 효과적인 범죄방어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행동의 결정성은 방어의 효과를 강화시켜준다. 후쿠야마가 그의 저서 『대붕괴』에서 사법적 온정주의가 지배하던 60-70년대의 미국사회를 예로 하여 보여주고 있듯이(후쿠야마, 2005?). 엄격한 법집행과 범죄율은 서로 반비례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이에크에게 책임원칙과 함께 예방이론은 질서를 구성하는 제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에게 예방이론은 범위반을 막기 위한 형법이라는 국가제도가 왜 필요한가를 말해주는 근본적인 주제이다. 그에게 중요한 국가의 과제는 법질서의 유지이다. 그 수단은 형법이다. 형법의 존재이유와 그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예방이론이다.

형법 그 자체의 존재에 관한 문제와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은 특정인을 왜 처벌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문제, 즉 법집행에 관한 문제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명료하게 구분한 판베르크에 따르면 (Vanberg, 2010: 16-17), 후자는 법집행이라는 형법실무와 관련된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증거”이다. 그래서 문제의 성격이 행동을 설명하는 문제에 속한다.³⁴⁾ 그는 이를

34) 그린/코헨이(Greene/Cohen, 2004: 1776-7)) 말한 것처럼 미래전망적인 예방이론의 관점은 달리 과거 회고적이다.

응보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예방이론은 누구든 범법자는 처벌한다는 일반원칙을, 그래서 수취인이 일반 시민들이다. 응보주의는 범법을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처벌한다는 원칙의 실행이고 그래서 그 원칙의 수취인은 범법자이다. 앞으로 법을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선언과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처벌 받아야 한다는 형벌실제의 관계이다.

판베르크의 이 같은 시각은 앞에서 논의한 코헨/그린의 신경과학적 생각과 전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응보이론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의지의 자유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방이론을 선호한다. 그들은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을 대안적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베르크는 예방이론과 응보주의를 대안관계가 아니라 계층적 보완관계로 간주한다. 이 같은 시각은 기포드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 그도 역시 방어론(예방론)은 형사정의의 시스템으로서 형법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일차적이고 피해를 준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응보주의는 2차적임을 말하고 있다.(Gifford, 2007: 285).³⁵⁾

그런데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판베르크에게 응보주의는 의지의 자유개념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응보주의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행동했든 무의적으로 행동했든, 또는 분별없이 행동했든 관련이 없다.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면 “행위의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범법행위가 처벌받는다. 판베르크는 이를 “행위의 장본인 원칙”을 말하고 있다. (Vanberg, 2010: 17). 응보주의는 하이에크의 행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판베르크의 이 같은 독자적인 해석은 응보주의와 같은 형법실무를 소홀히 했던 하이에크 사상을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두 형벌론을 계층적 보완관계가 아니라 대안관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고 결정론을 수용하는 측은 예방론을, 결정론을 인정하면서도 의지의 자유를 “유용한 픽션” 등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응보이론을 수용하고 있다(Horwitz, 2010, Wegner, 2002). 의지의 자유와 결정주의를 절충하는 측은 예방론과 응보주의도 절충하고 있다(김일수/서보학, 2006: 726-727).³⁶⁾ 문제는 이런 절충은 국가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을 막을 수 없다는

35)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면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을 갖게 마련이다. 형사적 정의(正義) 시스템을 냉철하게 합리화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정의 시스템의 일차적 목적은 방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6. 책임모형의 원천과 자유사회

사회적 구조물 또는 사회적 규약으로서 책임 원칙이 사회질서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원 또는 원천은 무엇인가?

하이에크는 그의 유명한 논문 <인간가치의 세 가지 근원>에서 책임원칙의 사회적 관행이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하이에크/ 민경국, 1989: 11; Hayek, 1978: Epilogue). 오늘날 문명된 사회를 가능하게 한 규범과 경제질서 그리고 법질서의 성공적인 진화의 상당부분은 책임원칙의 진화적 산물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생물학적 진화이든 문화적 진화이든, 인류의 진화,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는 반사회성의 진화가 아니라 친 사회성의 진화였다. 책임원칙도 인간의 친 사회성이 진화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이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우리의 동기시스템과 가치시스템은 옳음과 그름에 대한 감정을 산출한다.

더구나 그 같은 시스템은 그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자세도 야기했다. 이 같은 자세가 범위반을 막기 위한 형법이라는 국가제도의 도입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반자를 방어한다.

물론 처벌과 보상의 형태로 책임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성문화된 형법만이 아니다. 인류의 진화는 협력을 촉진하고 반사회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벌메커니즘이 자생적으로 생겼다. 양신의 가책과 같은 내재화된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비난과 칭찬 또는 그룹으로부터의 배제(따돌림) 등과 같은 비공식 처벌메커니즘 그리고 사적 그룹 내에서의 공식적 처벌 메커니즘 등, 무수히 많다. 이 같은 '내적 제도가 오히려 형법과 같은 외적 제도보다 사회질서의 강력한 뒷받침이다(Kasper/Streit, 1998: 103-105).

그래서 지나치게 법을 중시하면 책임을 오로지 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은 경제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다. 상이한 개인들간의 상대적 위치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승인도 책임에 대한 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반원칙으로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법적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법적인 것과 동

36) “절충형이 -----형벌이론의 현대적 추세“ 라고 말한다(김일수/서보학, 2006: 726)

일하게 작동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과 지식의 합리적 이용을 유발하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분별없는 위험추구를 지양하고 스스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강조하듯이 자유사회는 법에 의해 강요되는 의무를 넘어서 요구되는 책임감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 모두에 책임진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승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Hayek, 1960/1996: 136).

V. 맺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의지의 자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인간행동은 전적으로 자연주의적 인과성의 굴레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을 말할 수 없다는 신경과학의 인식을 자유주의 정치경제철학자, 하이에크의 사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신경과학은 하이에크와 똑같이 신경결정주의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이 후자가 1960년 그의 『자유의 헌법』에서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주의는 개념적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던 것과 똑같은 혼란에 빠져 있다.

이 글에서 보여준 것은 첫째로 신경과학이 말 하는 의지의 자유, 책임과 죄 개념은 개인적 현상을 말하는 심리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둘째로 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자유 대신에 행동의 자유를,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책임 대신에 사회적 규약으로서의 책임 개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칭찬과 비난 또는 처벌과 보상과 같이 인간행동을 인과적으로 변동시켜 지금까지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원칙의 기능이라는 점, 그래서 따라서 책임원칙은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동의 자유, 사회제도로서의 책임, 그리고 결정주의는 자유와 책임의 상호보완성을 위한 3대 조건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신경과학이 과거의 논쟁과 똑 같은 지적 혼란에 빠진 이유는 “행동을 설명하는 문제”와 그리고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제도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설명문제의 결론을 제도 문제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응보론과 예방론을 대립관계로 보거나 심지어 이들을

절충하려는 것도 그 같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주의는 옳다고 하더라도 책임원칙은 매우 유용하다는 기포드의 (Gifford, 2009: 203)의 주장도 옳지 않다. 결정주의가 옳기 때문에 책임원칙이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even if)가 아니라 ~이기 때문에(because)이다. 결정론이나 의지의 자유냐의 문제는 확신의 문제라는 주장도 틀렸고 절충주의 시각도 틀렸다. 그 문제는 과학(경험적 이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지의 자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신경과학의 인식은 매우 소중하다. 의지의 자유가 유용한 허구라는 주장도 버려야 할 대상이다. 자유주의가 이 같은 허구를 전제로 할 경우 자유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 뿐, 그것은 자유주의 이념의 전략으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의지의 자유는 변덕스럽고 목적없는(random) 행동이기 때문에, “규칙에 따르는 동물”이라는 경험적인 인간관과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 개념은 쓸모도 없는 그래서 버려야 할 개념이다. 루크레티우스는 신경과학이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고 결정론을 인정한다고 비판하는데(Lucretius, 2005), 이는 잘못이다. 신경과학이 행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신경과학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신경과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연구결과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과학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 신경과학의 인식을 수요하되, 그 인식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한다.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2006) 형법총론 박영사

민경국 (2007) 자유의 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연구, 한울아카데미

----- (2007a)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 (1997)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주류경제학과 질서경제학, 자유기업원

----- (1995) 진화냐 창조냐: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상, 자유기업원

----- (1993) 헌법경제학: 진화론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계약론적 입헌주의,

강원대학교 출판부

박상기(2009) 형법총론, 박영사

임일섭(1999) 행동규칙과 자생적 행동질서, 자유기업원
하이에크/민경국(1989)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문예출판사
후쿠야마,(2005?) 대붕괴 한국경제신문사 역

Blackmore, C.(1988) The Mind Machine, London

Bouillon, H. (1991). *Ordnung, Evolution und Erkenntnis*. Tübingen.

Caldwell, B. (2004) Hayek's Challenge, Chicago

Dempsey, G.T. (1996)Hayek's Terra Incognita of the Mind, Cato Institute,

Dennett, D. (2003) Freedom Evolves, London

Edelman, G. M (1992). Bright Air, Brilliant fire, New York

Fuster, J. (1995) Memory in the Cerebral Cortex, MIT Press

Gifford, A.(2007) The Knowledge Problem, Determinism, and *The
Sensory Order* Rev. of Austrian Economics vol. 20

------(2009)Michael S. Gazzaniga, The Ethical Brain in Journal of
Bioeconomics 11.

Goschke, Th.(2008) Der bedingte Wille. G. Roth/K.J.Grun(Hg) Das
Gehirn und seine Freiheit, Göttingen

Greene, J./Cohen,J. (2004) For the Law, Neuroscience Changes
Nothing and Everything, 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59

Hayek, F. A.(1978)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III Political
Order for Free People, London

------(1968) Theorie der Komplexe Phänomene, Tübingen 하이에크의 중요
한 논문을 편집 번역한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문예출판사
1989에 수록, 한글판에서 인용

------(1960/1995)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한글판 자
유의 헌정론 김 균 역 자유기업원 한글판에서 인용

------(1952/2002) The Sensory Order, Oxford 감각적 질서 민경국 자
유기업원

------(1948/1996)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박상수 역

-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자유기업원 한글판에서 인용
-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Chicago
- 1967)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hicago
- 1988)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London
- 1959/1979) Verfall und Mißbrauch der Vernunft, München
- Horwitz, S.(2008) Analogous Models of Complexity, in R. Koppl Exploration of Austrian Economics Bingley)
- 1920) I am not a "Neuro-Hayekian" I'm a subjectivist, in W. Butos(ed) The Social Science of Hayek's The Sensory Order, Bingley.
- Kasper, W/Streit, M. E. Institutional Economics, Cheltenham 1998
- Koppl, R. (2008) Scientific Hermeneutics: A Tale of Two Hayeks in R. Koppl(ed) Explorations in Austrian Economics Advances in Austrian Economics(vol.7) Amsterdam
- Loasby, B.J. (2004) Hayek's Theory of the Mind Advances of Austrian Economics 7.
- Lucretius (2005) Does Neuroscience Refute Free Will?
<http://mises.org/daily/1943>
- Mises, L. M. (1957) Theory and History, New Haven
- 1949) Human Action, 4.ed. New Haven
- 1962)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Princeton
- 1951). Socialism, New Haven
- North, D. C. (1992/1996)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자유기업원
- Pauen, M. (2008) Philosophische und psychologische Beiträge in E.-J. Lampe(Hg) Willensfreiheit und rechtliche Ordnung, Frankfurt/M
- Prinz, W. (2004) Der Mensch ist nicht frei, Ein Gespräch. Geyer, Ch. (hrs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 Frankfurt/M,
- Ratnapala, S. (2003)Moral Capital and Commercial Society,
 The Independent Review, v. VIII, n. 2, Fall 2003

- Rawls, J. (1970/1999) A Theory of Justice, Harvard
- Roth,G.(2003) Fühlen Denken, Handeln. Wie das Gehirn unser Verhalten steuert, Frankfurt/M.
- Shermer, M.(2008/2009) The Mind of the Market, 한글판 진화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 Singer, W.(2006) Der Freie Wille ist nur ein gutes Gefühl. Süddeutsche Zeitung 2006. 4. 25
- .(2004) Verschaltungen legen uns fest: Wir sollten aufhören, von Freiheit zu sprechen Geyer, Ch.(hrsg.) Hirnforschung und Willensfreiheit , Frankfurt/M,
- Smith, V. (1999) Reflections on Human Action After 50 Years, Cato Journal Vol. 19, No. 2
- Vanberg, V.(2004) Austrian Economics, Evolutionary Psychology and Methodological Dualism: Subjectivism Reconsidered, In R. Koppl(e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Economic Theory of Advances in Austrian Economics(vol.7) Amsterdam
- .(2010) Freiheit und Verantwortung: Neuro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und Ordnungswirtschaftliche Folgerungen, Walter Eucken Institut
- Weaver, W.(1967) Wissenschaft und Komplexität, Ordo 18.
- Weimer, W.B. 1982. "Hayek's Approach to the Problems of Complex Phenomena. An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Psychology of <the Sensory Order> ". in: Weimer, W. B./ Palermo, D. S.(ed). *Cognition and the Symbolic Processes*. Bd. 2, New Jersey.